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9. 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국제통화기금(IMF) - 부패로 전 세계 1조 달러 세입 손실 1
- G20이 반부패에 앞장설 수 있는 4가지 방법 3
- 부패 스캔들로 오스트리아 부총리 사임 7
- 파리생제르망 회장, 국제육상경기연맹 부패 사건 조사받아 ... 11
- 월마트, 해외 지사의 부패 혐의로 2억8천2백만 달러 납부 ... 14
- 전 세계를 뒤흔든 부패 스캔들 25 17

II 국제회의 동향

- '19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35
- '19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38
-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39
- '19년 OECD 제2차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40

III 옴부즈만 소식

- 태국: 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을 위해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 42
- 영국: 혼란을 야기한 요금 정보 안내 이후 런던 시의회와 노인요양원의 정책 개정 ... 44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46
- 세계옴부즈만협회 : 멕시코 메리다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개최 ... 48
- 포르투갈: 옴부즈만 지방도로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절차 완료 ... 49
- 호주 : 옴부즈만 조사 결과 정부 관재사가 취약계층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50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국제통화기금(IMF) - 부패로 전 세계 1조 달러 세입 손실 (Reuters, 2019.4.4)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 척결을 통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입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나타났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 척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7천6백2억3천만 파운드) 규모의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F는 반부패 노력이 정부의 세입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를 줄이고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IMF 보고서는 ‘부패가 줄어들면 세금 낭비도 줄어들고 지출도 줄어들며 이에 따라 공교육과 사회기반시설의 질이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 IMF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낮은 반부패 인식과 높은 세입이라는 패턴이 선진국, 신흥국, 저소득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 또한, 보고서는 ‘선진국 가운데 부패 척결 측면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국가들은 하위 25%의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GDP의 4.5%를 세금으로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 징수액의 차이는 신흥경제국에서 GDP의 2.75%, 저소득국가에서는 GDP의 4%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투명성, 강력한 추진이 핵심

-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산업과 석유채굴업 등의 채굴 산업이 공공조달 및 국영기업 경영 등과 함께 부패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 요소로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뽑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역할 강화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IMF 세계 담당 부서의 파올로 마우로(Paolo Mauro) 부국장은 ‘IMF는 투명성이 국가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놀라운 사실은 투명성의 영향력이 언론의 자유 또는 견고한 시민사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경우에는 심지어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권고사항 중에서도 IMF는 성과기반 채용과 세제 규정 및 경영 규정 등을 포함한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넬 필요성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보고서는 부패 척결을 위하여 기술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공공조달을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위 ‘전자조달’이라고 부르는 온라인 공공조달 시스템은 ‘투명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제도로, 국내 또는 세계 어디에 위치한 기업이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투명한 입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IMF는 말했다.
- 전자조달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로 칠레와 한국이 언급되며, 르완다와 조지아는 GDP 대비 세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부분을 원자재 채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부패 척결의 성공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IMF는 ‘누구든지 매우 좋은 제도와 높은 수준의 투명성,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감독 등에 투자하고 싶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부패 척결로 수조에 달하는 세입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뇌물 수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연간 비용이 1조5천억에서 2조억 달러에 달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뒤이어 발표되었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costs \$1 trillion in tax revenue globally - IMF (Reuters, 2019.4.4.)

G20이 반부패에 앞장설 수 있는 4가지 방법 (TI, 2019.5.14)

국제투명성기구는 G20 국가들이 지난 수년 간 논의한 자산회복, 공공조달 등 반부패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 올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7억 명이 살고 있다.
- G20 국가들은 전 세계 GDP의 85%, 국제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무역 분쟁과 고립주의,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대에 G20국가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G20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공유의 장으로 남아있다. 최근의 불거진 부패 스캔들을 보면 무역과 금융의 국제화에 부패의 국제화가 수반된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때문에 반부패 대책에 대하여 각국 정부와 협력하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이 더 공정한 세계를 위한 싸움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
- ACWG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이번주 멕시코시티에서 회담을 갖는다. 국제투명성기구나 국제투명성기구 멕시코 지부(Transparencia Mexicana)도 해당 회담에 참석하여 몇몇 핵심 분야에서 G20의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 G20 지도자들

-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지난 수년간 G20 국가들은 자산 회복,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익명의 기업 소유, 이해관계, 정부 공개와 공공조달 등과 관련하여 60개 이상의 반부패 합의사항을 발표해왔다.
-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공약의 대부분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모인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회의장 주변에 게시된 대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G20 국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게도 G20 지도자들에게 행동의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더군다나 더 어려워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ACWG의 우선순위는 G20 국가들이 반부패 합의사항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놓여져야 한다. 특히, G20 국가들은 합의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내용 각각에 대하여 책임 이행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세 개의 핵심 분야에서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경제 강국들에게 제시한다.

공익신고

- 2019년은 이미 G20국가의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과 호주에서 최근 채택한 민간부문 개혁안은 매우 선진적인 조항들이다.
- G20은 이를 발판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G20 상위 원칙’의 채택과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공익신고 법령을 위한 국제 원칙’과 같은 국제 기준 및 모범사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G20 국가의 모든 공익신고자는 신뢰할 수 있고 양성 간 형평성과 특성을 고려한 부정행위 신고 수단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들이 공개하는

정보는 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

- G20의 기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 금융 비밀을 보장해주는 지역에 설립된 익명의 유령회사들이 사회기반시설 공사 관련 부패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목격되어왔다. 이런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공개해야만 했다면 뇌물이나 불법 사례금, 공공계약 수주 관련 이해관계 충돌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G20은 2014년 ‘수익소유권 투명성에 대한 상위 원칙’(실제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을 채택했으나 그 진전에 대한 최근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원칙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공공조달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증가되면 공공자금이 정치인과 그 측근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성취를 이뤄내기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 페루 지부는 일련의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사회적 감사를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며, 이를 통하여 미화 8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젠더

- 부패는 여성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학교 공무원, 의료인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또한 성관계가 뇌물이 되는

성 착취 범죄 등 특정 형태의 부패에 특히 더 취약하다.

- 부패는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 및 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G20 지도자들이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분명한 윤리적 이유 이외에도 여성의 평등한 노동시장 참여는 국제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온다.
- 이 분야에서 ACWG는 최근의 행동계획에서 반가운 공약을 내놓았다. 이제 실무그룹과 G20 회원국 모두 모든 반부패 업무에 대해 각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 일본이 주최한 올해 회담에서 G20이 채택한 모든 상위 원칙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확실한 원칙 이행을 도울 수 있다. 시민사회는 또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CWG가 회담에 시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더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부패 감소를 위해 G20국가들의 역할 수행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부터 6월 말까지 국제투명성기구는 G20이 정말로 반부패 노력을 선도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 원문기사 : FOUR WAYS THE G20 CAN TAKE THE LEAD ON ANTI-CORRUPTION

(The Guardian, 2019. 5. 14.)

부패 스캔들로 오스트리아 부총리 사임 (STANDARD DIGITAL, 2019.5.18)

오스트리아 슈트라헤 부총리는 2017년 오스트리아 총선거 몇 달 전 러시아 후원자로 위장한 여성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공계약 수주를 약속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부총리직을 사임했다.

- 유럽 극우 정치의 핵심 인물인 오스트리아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부총리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몰래카메라를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로 인하여 지난 토요일 사임했다.
- 슈트라헤는 TV 성명에서 다소 감정적인 모습으로 ‘쿠르츠 총리에게 부총리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총리께서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 지난 금요일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트라헤는 2017년 오스트리아 총선거 몇 달 전 이비사 섬에서 만난 가짜 러시아 후원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공계약 수주를 약속했다.
- 독일 슈피겔과 수에드도이치 자이퉁은 고급 빌라에서 벌어진 정교한 몰래카메라 작전으로 입수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 슈트라헤는 토요일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정치적 공격의 희생양’이지만 정부에 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사임한다고 말했다.
- 총리가 조기 선거를 밀어부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는 토요일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
- 문제의 영상에서 슈트라헤와 자유당 원내대표인 요한 구데누스(Johann Gudenus)는 러시아 집권층 인사의 조카로 위장한 여성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슈트라헤는 이 만남이 사적인 성격이었고 술김에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였으며, 그 이후 해당 여성을 만난 일이 없고 자유당이 그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 슈트라헤는 가족과 친구, 지지자들에게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내가 멍청하고 내가 무책임했다. 나의 실수가 맞다’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 또한, 슈트라헤는 자신의 극우 자유당 당대표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으며 교통부 장관인 노베르트 호퍼(Nobert Hofer)가 임시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49세의 슈트라헤는 문제의 동영상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구데누스 역시 모든 정치적 직위에서 사임했다.
- 문제의 동영상에서 러시아 유력 정치인의 조카로 위장한 여성은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타블로이드지인 크로네자이팅의 지배권을 원한다고 말한다.
- 슈트라헤는 새로운 소유주들이 크로네지의 임직원을 교체함으로써 자유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슈트라헤는 문제의 여성에게 그 이후 공공계약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트라헤는 ‘언론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크로네의 편집진을 교체하는 데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를 내보낸 신문사 모두 누가 문제의 몰래카메라 작전을 세웠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크로네자이퉁지는 토요일자 신문에 이 보도 내용에 대하여 분노한 어조로 '자유당은 끝장이다!'라는 1면 표지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 디 프레쎬 신문은 '연정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 오스트리아 APA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은 슈트라헤의 후임으로 호퍼 부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쿠르츠의 중도우파 국민당과의 연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동영상의 다른 부분에서 슈트라헤는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사 ORF를 사유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언론 지형이 이웃나라 헝가리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 헝가리의 우파 민족주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그 측근들이 민간 언론 분야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장악한 가운데 자국의 공영 언론을 정부 선전기관으로 전락시켰다.
-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ORF 통신의 보도를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보도가 자유당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동영상에서 슈트라헤는 법적 제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유당에 대한 직접 후원 대신 관련 재단에 정치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당 고위인사 사이의 극단주의 정서가 지난 몇주 동안 밝혀진 이후 쿠르츠는 벌써부터 극우정당과 연정으로 정부에 진입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특히 이번 스캔들이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추정은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다. 자유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합 러시아당과 협정을 맺은 바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당과 푸틴 대통령의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음주 선거의 자유당 대표 후보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헤랄드 빌림스키(Herald Vilimsky)는 이탈리아의 극우 내무장관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와의 선거운동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밀라노 방문계획을 취소했다.
- 슈트라헤는 지난 2005년 전임자 외르크 하이더(Joerg Haider)를 뒤이어 자유당 당대표가 되었다.
- 젊은 시절 신나치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슈트라헤는 당대표가 된 이후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중에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왔다.

※ 원문기사 : Scandal-hit Austrian Minister resigns over corruption (TI, 2019. 5. 18.)

파리생제르망 회장, 국제육상경기연맹 부패 사건 조사받아 (The Guardian, 2019.5.23)

파리생제르망 켈라이피 회장은 카타르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나세르 알 켈라이피(Nasser al-Khelaifi) 회장이 2017년과 201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과정에 대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프랑스 사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육상경기연맹 임원에게 공여된 3백50만 달러의 뇌물에 초점을 맞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중순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자 비인 미디어그룹(beIN media group)의 회장이기도 한 켈라이피에게 ‘적극적 부패행위’라는 예비 혐의가 제기 되었다고 밝혔다.
- 관계자는 또한 카타르 출신인 켈라이피가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육상 선수권대회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켈라이피의 변호인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비인 미디어그룹은 해당 사건이 ‘우리 회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 외에는 다른 언급을 피했다.
- 비인 미디어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유세프 알 오바이들리(Yousef al-Obaidly) 역시 부패 예비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제육상경기연맹의 라민 디악(Lamine Diack) 전 회장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한 ‘수동적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 오바이들리의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예심판사 르노 반 루임베케(Renaud Van Ruymbeke)가 세계육상경기연맹의 전 임원이 2017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 투표 전에 카타르 투자자들로부터 두 번에 걸쳐 총 3백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카타르는 결국 투표에서 런던에 패하였으나

이후 2019년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다.

- 카타르 정부와 연관된 투자기금인 오릭스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에서 문제의 돈을 개최지 선정 투표 며칠 전 2011년 10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 파모찌 스포츠 마케팅에 지급했다.
- 오바이들리의 대리인은 오릭스가 세계육상경기연맹 지정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돈은 정상적인 유치 과정의 일부로서 투명하게 처리된 절차였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유치신청 협찬과 권리관계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릭스는 육상선수권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위하여 3천2백 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이 중 3백50만 달러가 파모찌에 환불이 불가능한 보증금으로 지불되었으며, 카타르가 2017년 선수권 유치에 성공하는 경우 잔액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온라인 뉴스 사이트 미디어파트(Mediapart)의 보도에 따르면 오릭스는 켈라이피와 그 형제인 칼리드의 소유이다. 미디어파트는 켈라이피가 3월 반 루임베케 판사의 조사를 받았으며 문제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파모찌는 라민 디악의 아들 파파 마사타 디악이 설립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전 마케팅 컨설턴트인 파파 마사타 디악은 2012년 올림픽 이전에 도핑으로 인한 출전 금지를 피하고자 했던 러시아 마라톤 선수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갈취했다는 의혹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는 파파 마사타 디악에 대해 인터폴 공개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브라질과 프랑스 당국 또한 라민 디악과 그의 아들이 리우데자네이루의 2016년 올림픽 유치를 돕기 위하여 뇌물 수수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한 라민 디악은 또한 돈을 받고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켈라이피는 유럽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며,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다음주 수요일 열리는 연맹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 켈라이피는 2017년부터 스위스에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 소속 연맹들로부터 축구단 대표로 선출되었고 실제 취임에 성공했다. 켈라이피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이용하여 국제축구연맹의 당시 사무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2026년과 2030년 월드컵의 중동지역 중계권을 도하에 위치한 비인 스포츠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또한 재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유럽축구연맹의 조사를 받는 중이기도 하다.

※ 원문기사: PSG president under investigation in IAAF corruption case (Channel News Asia, 2019. 5. 23.)

월마트, 해외 지사의 부패 혐의로 2억8천2백만 달러 납부

(The Washington Post, 2019.6.20)

월마트는 멕시코, 브라질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억8천2백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하였다.

-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점 체인 월마트가 지난 수년간 해외 사업의 급격한 확장을 가능하게 한 내부부패를 묵인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2억8천2백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지난 목요일 미 당국과 합의했다.
-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의 일부로서 월마트는 부정 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기업이 해외 사업을 위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7년간의 조사가 종결되었다.
-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이상 월마트 임원진은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해외 지사들이 회사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묵인함으로써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 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월마트는 10년 전에 비해서 9백90억 달러 늘어난 1천2백8억 달러의 해외 판매액을 기록했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해외부패방지법 담당 부서장인 찰스 케인 (Charles Cain)은 성명서를 통하여 ‘월마트는 법의 준수보다 해외사업 성장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2005년 월마트의 전 변호사는 멕시코에서 월마트가 제3자를 통하여 정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돈을 지급하고 사업 승인과 허가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성명서에서 문제의 돈이 ‘법적 요건의 회피’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문제의 제3자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 미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 월마트는 내부적으로 ‘마법사’ 또는 ‘지니’라고 알려진 제3자를 간접 고용했는데, 임원들은 법적으로 문제의 인물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09년 해당 인물은 현지 월마트 지점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돈을 지급했다.
- 브라이언 A. 벤츠코우스키(Brian A. Benczkowski) 법무부 보좌관은 ‘많은 경우 월마트 고위 임원들은 해외 지사가 회사 내부 반부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년 동안 미국의 형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월마트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회사의 국제적 반부패 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며, 월마트의 회장이자 CEO인 덕 맥밀런(Doug McMillon)은 ‘월마트는 올바른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해외 지사 모든 곳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월마트는 가장 신뢰받는 마트가 되고 싶으며 그 핵심은 청렴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월마트 해외 사업의 급격한 성장세는 최근 특정 시장에서 소비자 유치에 고전하면서 둔화되었다. 월마트는 2006년 한국과 독일에서 모든 매장을 철수했으며 지난해에는 영국과 브라질에서의 투자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분기에서 월마트의 미국 내 매출이 3.3% 상승하는 동안 해외 매출은 4.9% 하락했다.
- 법무부와 합의사항으로 월마트는 3년간의 불기소를 대가로 독립적 권한이 있는 준법감시인을 2년간 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월마트는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의 영업 정보만 공개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멕시코 사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일부분에 대해 감경 받았다.

- 2억8천2백만 달러의 합의금 중 법무부와 관련된 금액은 1억3천7백만 달러이고, 월마트는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형 지침 대비 20%의 벌금 삭감을 받았다. 또한 브라질, 중국, 인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삭감을 받았다.

※ 원문기사 : Walmart to pay \$282 million to settle charges of corruption at its foreign subsidiaries (The Washington Post, 2019. 6. 20.)

전 세계를 뒤흔든 부패 스캔들 25 (TI, 2019.6.26)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고위층 공직자의 부패, 거액의 뇌물 사건 등 세계를 뒤흔든 대규모 부패 스캔들 25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창설된 25년 전만 하더라도 부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필수적인 대가로 여겨졌으며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맞서 싸워봐야 소용없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시민과 언론이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과거 부패 스캔들의 폭로와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25년간 다수 대중의 규탄과 정권의 실각, 관련자들의 구속을 야기한 대규모 부패 스캔들 중 일부를 선정했다. 정치인,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 어마어마한 액수의 뇌물과 방대한 규모의 자금세탁 등이 이러한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 이러한 부패 스캔들 대다수의 결과로 전 세계 국가와 국제기구가 반부패 개혁 의지를 다지거나 실행에 옮겨 왔으며, 부패로 인한 손실을 정확히 집계하고 일부의 경우 손실을 회복하기도 했다.
 - 부패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규범과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캔들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지멘스: 독일제 부정부패
 2. 나이지리아 국부 유출
 3. 페루 후지모리 : 암살단, 횡령, 그리고 국민적 인기
 4. 체첸 카디로프 : 자전거, 복싱, 뇌물
 5. 경쟁이 차단된 튀니지

6. 우크라이나, 사라진 수 백만달러
7. 파나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의 스파이 게임
8. 1MDB 펀드: 말레이시아에서 할리우드까지
9. 러시아 세탁소 (몰도바가 보조)
10. 스페인 최대의 부패 스캔들: 구르텔
11. 베네수엘라의 환전 부패
12. 파나마 페이퍼스
13. 몰디브: 잃어버린 낙원
14. 적도 기니 테오도린 오비앙의 럭셔리한 생활
15. 굽타 일가는 어떻게 뇌물을 통해 남아공을 장악 했는가
16. 레바논의 쓰레기 : 부패의 악취
17. 피파의 축구 평행우주
18. 미얀마의 불법 옥 산업
19. 과테말라, 부패에 대한 면책과의 싸움
20. 터키의 '석유-금' 거래 책략
21.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22.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 부자와 권력자의 돈이 숨겨진 곳
23. 라바 하토 작전 : 깨끗한 차, 더러운 돈
24. 트로이카 세탁소
25. 체키아 안드레이 바비시의 이해관계 충돌

1. 지멘스: 독일제 부정부패

- 해외로 공여한 뇌물에 대하여 독일 기업들이 1999년까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문제의 지출이 독일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외국 공직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독일 기업들은 이러한 뇌물을 그저 '유익한 지출'로 생각해 왔다.
- 2006년, 독일 대기업 중 하나인 지멘스가 전례 없는 수준의 뇌물 수수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멘스는 전 세계 정부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에게 10년 이상 기간 동안 대략 미화 14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 부패한 정부 의사결정자들이 그러한 이익을 누리는 동안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도로나 발전소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다.
- 지멘스의 이러한 수상한 거래는 결국 미국, 독일 등 몇몇 국가 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조사가 개시되면서 결국 역사적인 금액인 미화 16억 달러 상당의 제재가 부과되었다.

2. 나이지리아 국부 유출

- 사니 아바차(Sani Abacha)는 나이지리아 군 장성 출신으로 1993년부터 1998년 사망 시까지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지낸 독재자이다. 아바차가 집권한 5년 동안 수많은 부패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드러나지 실제 부패 범위와 심각성은 아바차의 사후에 드러났으며 재임 중 미화 30억~50억 달러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미 법무부에서 2014년 아바차와 그 공모자들이 전 세계에 은닉한 미화 4억5천8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을 동결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나이지리아 정부가 수년간 횡령된 자금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으나 아바차 일가와 관련된 기업들은 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비밀 자금을 숨겨주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저지아일랜드가 도이체뱅크에 은닉된 미화 2억6천8백만 달러를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될 국부회복펀드로 반환하는 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는 점이다.

3. 페루 후지모리 : 암살단, 횡령, 그리고 국민적 인기

- 인권침해 혐의로 재판받는 전 대통령이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75% 이상을 정치인과 판사, 언론에 대한 뇌물로 지급함으로써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 후지모리는 대통령은 재임 중 대중 앞에서는 청렴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뒤로는 암살단을 고용하여 반정부 게릴라를 살해하고 미화 6억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일본으로 망명한 이후 후지모리는 전 세계 선출직 국가수반 중 첫 번째로 본국 송환된 사례가 되었으며 인권유린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후지모리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부패로 조사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의 대열에 합류했다.

4. 체첸 카디로프 : 자전거, 복싱, 뇌물

-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한다면 어떨까? 체첸인들에게는 이것이 매달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체첸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불투명한 기금에 대하여 비공식적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 문제의 기금으로 국민 주택과 회교 사원을 건설하고 소말리아에 국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들이 초청된 카디로프의 초호화 35세 생일파티와 마이크 타이슨과의 2백만 달러짜리 복싱 수업, 국수주의자 폭주족에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물한 오토바이 16대 등에도 이 돈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일부 체첸인들은 수입의 절반을 문제의 기금에 내주어야 했으며, 기금의 연간 징수액은 미화 6억4천8백만에서 8억6천4백만 달러 규모로 체첸 공화국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이다. 카디로프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 문제의 기금을 사유화해 마음대로 써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 경쟁이 차단된 튀니지

- 튀니지에는 빅맥이 없다. 튀니지 지배일가와 연줄이 없는 사업체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부여받으면서 튀니지 정부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국내 시장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 벤 알리(Ben Ali) 튀니지 전 대통령은 1987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기업이 특정 분야 투자와 영업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들을 신설했다. 이 법을 통하여 이동통신, 운송, 부동산 등 수많은 산업 분야를 독점경영 기업 220개가 독점하게 되면서 경쟁이 차단되었다. 해당 기업들의 튀니지 경제 생산 기여율은 2010년에 3%에 불과했지만 민간부문 수익은 21%를 차지했다. 벤 알리 일가가 미화 130억 달러의 상당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울 것도 없어 보인다.
- 튀니지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의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고용 기회가 사라지고 신생 기업이나 연줄이 없는 투자자들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 벤 알리는 2011년 망명했으며 그의 자산은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의 법령 중 일부만이 폐지되었고 미심쩍은 방법으로 산업 진출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다.

6. 우크라이나, 사라진 수백만 달러

- 수백만 달러 가치의 137헥타르 부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전 대통령의 사저 '메ঝ히랴'(Mezhyhirya)에서 골프장, 타조농장, 개인 동물원에 실제 크기의 스페인 범선 모형까지 온갖 사치품이 발견되었다.
- 야누코비치와 그 일가는 2014년 2월 저격수 등에 의하여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대규모 소요사태 이후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3년 후 우크라이나 법원은 야누코비치에 대한 권력 재판에서 내란죄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 야누코비치는 망명을 하면서 많은 문서들을 남겼고, 이를 통해 그가 국민의 돈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 왔는지가 드러났다. 야누코비치가 비엔나, 런던, 리히텐슈타인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복잡한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명의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형태로 자신과의 연관을 숨기면서 우크라이나 공공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지난 2월 스웨덴 공영방송 SVT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야누코비치의 유령회사가 2011년에 미화 3백7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2007년과 2014년에 미화 총 1천8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미화 4백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자산이 사라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15억 달러에 불과하다.

7. 파나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의 스파이게임

- 파나마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이후 사생활보호법 위반, 횡령, 직권남용, 불법행위 연루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 기간 중 마르티넬리는 파나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 하에 이루어진 학교 급식 및 학생 가방 등에 대한 공공계약 입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 150명 이상의 휴대폰을 사찰하는 데 공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 마르티넬리는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파나마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인하여 마르티넬리는 올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후 정계에 복귀하여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8. 1MDB펀드: 말레이시아에서 할리우드까지

-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사건인 1MDB 스캔들과 관련하여 미화 40억 달러 상당이 횡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년 개발펀드 ‘1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를 설립했다.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가 이끈 1MDB는 원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전 총리 자신과 도피 중인 은행가, 미국 래퍼 등 소수의 개인 은행 계좌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유명회사 네트워크 및 다층적 거래를 통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금이 뉴욕의 호화 부동산과 그림, 연예인을 위한 선물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라작의 개인 계좌에 미화 7억 달러 이상이 예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라작은 문제의 돈이 사우디 왕자로부터의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작은 현재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9. 러시아 자금세탁기 (몰도바가 보조)

-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중 5분의 1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며 36%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로부터 미화 2백~8백억 달러 상당의 공공 서비스 기금을 빼돌린 거대 돈세탁 사건인 ‘러시아 자금세탁기’가 그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 러시아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하여 영국에 등록된 유명회사들이 서로에 대해 허위 대출을 해주고 몰도바인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러시아 회사들이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이 채무자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몰도바의 부패 판사들이 러시아 회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몰도바 은행계좌에 해당 채무액을 입금할 것을 명령했다. 그 이후 문제의 돈은 라트비아와 다른 유럽연합국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가 결국 돈세탁되었다.
- 현재 다수 국가에서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몰딘콘뱅크, 단스케 은행, 도이체 방크, HSBC 등 연루된 은행들이 돈세탁 방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 스페인 최대의 부패 스캔들: 구르텔

- 지난 10년 동안 구르텔 사건은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캔들로 비화되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복잡한 계획을 통하여 정부계약 조작의 대가로 공여된 기부금과 뇌물이 당시 여당으로 흘러들어갔다.
- 구르텔이라는 이름이 스페인어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르텔은 스캔들의 핵심 인사인 기업가 프란시스코 코레아(Francisco Correa)의 성을 독일어 번역한 것으로, 영어로는 ‘벨트’를 의미한다.
- 코레아는 결국 징역 5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측근이자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전 대통령 행정부의 재무장관은 미화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 2018년 6월 라호이 정권의 붕괴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해당 사건의 주요 목격자이자 내부고발자 아나 가리도 라모스(Ana Garrido Ramos)의 도움으로 문제의 부패 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다.

11. 베네수엘라의 환전 부패

-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정치적·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부패가 그러한 상황을 불러오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
-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자행한 약탈은 정부 최고위층에 만연한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때 베네수엘라 국부의 기반이었던 광대한 석유자원은 결국 극소수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 유럽과 미국 은행들의 도움으로 베네수엘라 전직 공직자 집단이 특정 인물과 기업들만 엄청나게 부풀려진 공식 환율로 외화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환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PDVSA로부터 미국으로 미화 12억 달러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 문제의 공직자들은 암시장에서 약 1:100의 환율 (2014년 기준)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를 샀는데, 이는 1백만달러로 1억볼리바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이들은 공식 환율인 1:10으로 다시 환전을 하면서 10배의 금액인 1천만불의 차익을 취했다. 이 스캔들에 연루된 두 명이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수사당국은 현재 이 돈세탁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12. 파나마 페이퍼스

-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대규모 정보유출로부터 시작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비밀금융업계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드러났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모색 폰세카가 자신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기를 원하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유령회사 214,000

개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유령회사들을 통하여 인신 매매나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또는 제재대상에 오른 고위 정부관료 12명과 33명의 개인 및 기업 등을 포함하여 최소 140명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불법 자금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스캔들이 불거진 후 여러 국가의 국가수반이 사임하거나 기소되었고 최소 82개국에서 정식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모색 폰세카는 문을 닫았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의 결과로 다수 국가에서 비밀 금융 산업이 종식되었고 최소 16개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 냈으며 약 23개국에서 최소 미화 12억 달러 상당이 세금으로 회수되었다.

13. 몰디브: 잃어버린 낙원

- 관광은 몰디브 경제의 주축이며 돈이 가장 몰리는 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디브의 최대 부패 스캔들이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을 것이다. 알자지라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미화 약 15억 달러 상당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설계의 거짓 관광투자 사업을 통하여 돈세탁 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돈은 현금으로 몰디브로 옮겨져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민간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광산업 투자로부터 발생한 적법한 이익금인 것처럼 위장되었다.
- 몰디브에서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관광산업 관련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밝혀진 또 다른 스캔들은 몰디브의 섬과 해저 산호초 50개 이상이 입찰계약 절차 없이 관광개발업자들에게 임대되었고 최소 미화 7천9백만 달러 상당의 임대료가 민간 은행 계좌로 횡령되어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지 사업가들과 국제관광사업자들,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이 이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14. 적도 기니 테오도린 오비앙의 #럭셔리한 생활

- 테오도린 오비앙(Teodorin Obiang)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럭셔리한 생활이라는 해시태그로 자신의 호화저택, 수백만 달러 어치 마이클 잭슨 관련 수집품, 슈퍼카들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나 오비앙은 부친의 뒤를 이어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적도기니의 나랏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 석유자원이 풍부한 적도기니는 아프리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국민의 4분의 3가량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1979년 이래로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오비앙 일가와 그 측근들은 국민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지속적으로 횡령해 왔다.
- 이 부패정치 체제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고 있는 테오도린 오비앙은 수차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2014년 테오도린 오비앙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고 미화 3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프랑스 당국은 2017년 오비앙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미화 3천5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스위스 당국은 오비앙의 슈퍼카 24대를 압수했다. 이는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비앙이 적도기니 밖으로 빼돌린 방대한 규모의 불법자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15. 굽타 일가는 어떻게 뇌물을 통해 남아공을 장악했는가

- 굽타 일가는 소위 ‘현대적 쿠데타’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권을 장악했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주마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높은 수입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등의 방식으로 아자이, 아툴, 라제시 굽타(Ajay, Atul, Rajesh Gupta)는 남아공에서 세력을 장악했다.
- 굽타 일가는 무려 미화 7십억 달러 상당의 나랏돈을 횡령했는데, 여기

에는 44억 달러 규모의 남아공 철도항만회사와의 공급계약 건이 포함 되어 있었다. 굽타 일가는 또한 정부 각료들을 임명 및 해임했고 그 동안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조세 관련 공직자들과 정보 담당관들을 해직시켰다.

- 2016년 차관 한 명이 재무부 공무원의 해임을 대가로 굽타 일가가 자신에게 준 미화 4천5백만 달러의 뇌물에 대해 폭로하면서 굽타 일가는 망명했다. 그 이후 주마 대통령이 실각하고 부패와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후임인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패로부터 깨끗한 남아공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전 정권에서 임명한 다수 공직자들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채로 남아있다. 그 와중에 남아공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16. 레바논의 쓰레기: 부패의 악취

- 때로는 더러운 돈이 도시를 실제로 더럽게 만들 수도 있다. 2015년 이래로 레바논은 쓰레기 위기를 겪고 있으며 거리와 해변이 쓰레기 봉투와 심각한 악취, 오염된 물로 뒤덮여 있다. 레바논 베이루트와 마운트 레바논의 쓰레기 처리업체 수클린(Sukleen)사에서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면서 이처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 1990년대 이래로 업계를 독점해 온 해당 회사는 실제 사용 가능 기간 보다 12년이나 더 이용되어 더 이상 쓰레기 수용 능력이 없어진 매립장을 폐쇄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외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수거되지 않고 거리에 그냥 쌓여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단 하나의 회사가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수클린사는 레바논의 총리 두 명과 강력한 연줄을 가지고 있었다. 레바논에는 정치 후원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계약 수주가 정치적 연줄이나 뇌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곤 한다.

- 쓰레기 위기 스캔들로 인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와 부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유 스타크’(You Stink-‘냄새나’) 시민운동이 촉발되었다.

17. 국제축구연맹의 축구 평행우주

- 2015년 5월 27일 국제축구연맹(FIFA)의 전·현직 임원 9명이 갈취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면서 스포츠계 지형이 단숨에 바뀌었다. ‘축구계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부패’가 급격히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 부패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제프 블라터(Sepp Blatter)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임에 성공하면서 축구계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또 다른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와 3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축구 팬 사이트 포르자 풋볼(Forza Football)은 50개국 이상의 축구팬 25,000명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축구팬의 53%가 국제축구연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전 세계 축구팬의 25%만이 새롭게 선출된 지아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회장이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미얀마의 불법 옥 산업

- 풍부한 자연자원의 혜택이 부패한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그 와중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재난을 야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얀마가 있다.
- 2015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한 군 장성들과 마약왕들 그리고 그 측근들이 미얀마 북부의 옥 광산을 불법 채굴하고 이렇게 생산된 옥을 중국으로 밀수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14년에만 총 미화 3백10억 달러 이상의 옥 원석이 채굴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미얀마 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억 달러 정도가 세금으로 징수되어서, 해당 광산 지역 주민과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막대한 이익을 조금도 누리지 못했다.
- 이와 동시에 옥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는 무장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지나친 채굴로 환경이 파괴되고 광산 사고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가 불법 옥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 채굴 산업은 해당 지역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 과테말라, 부패에 대한 면책과의 싸움

- 과테말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약 90%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의 극복이 과테말라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UN이 지원하는 과테말라 반면책국제위원회(CICIG)가 지난 12년간 그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CICIG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5년에는 과테말라의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임했고 결국 기소되었다. 그 이래로 CICIG는 고위급 부패 사건 수십 건을 조사해 왔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 그러나 CICIG가 2017년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을 때 모랄레스는 CICIG가 과테말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되었던 UN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지난 수년간 모랄레스 대통령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묵살하고 과테말라의 반부패 노력에 대항해 왔다.

20. 터키의 '석유-금' 거래 책략

-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2013년 터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터키 경찰은 터키 지배 엘리트 일가의 집 두 곳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기습·수사했고 수사 중에 뇌물로 추정되는 미화 1천7백5십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 스캔들의 핵심에는 기업인 레자 자라브(Reza Zarrab)가 연루된 이란과의 '석유-금' 거래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라브는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조치의 맹점을 이용하는 책략의 일부인 돈세탁 계획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52명 모두 집권 정의 개발당(AKP)와 연관된 인사였다.
-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은 스캔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를 이끄는 판사와 검사 수 백명에서 수 천명의 경찰을 해임시키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 아제르바이잔 자금세탁기

-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정부들은 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 정치 지도자들이 유럽의회 의원총회 대표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비판적인 선거 감독 보고서의 논조를 완화하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인 덴마크의 최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영국 유령회사 4개를 통하여 뇌물을 주고, 돈세탁을 하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되었다.
-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인권기구에 먹칠을 한 주범에게 아직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총회의 독립 수사단이 부패와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대표 일부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고 이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 독일 지부는 최근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했다. 단스케 은행은 이와 관련된 혐의 및 돈세탁 스캔들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부정한 돈거래를 처리한 지점의 폐쇄 명령을 받았다.

22.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부자와 권력자의 돈이 숨겨진 곳

- 해마다 각국에서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법인 소득세가 미화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개인 소득세는 그 몇 배에 이른다. 이는 연간 UN 원조 예산의 20배 이상의 규모이며 많은 국가를 빈곤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 버뮤다에 위치한 고급 로펌 애플비(Appleby)에서 대규모로 유출된 문서에 근거하여 2017년 진행된 주요 조사 결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금융 세계가 드러났다. 탐사 보도 프로젝트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조사 결과 정치인, 왕족, 독재 정치인, 사기범 등 120명이 비밀 조세회피처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해 왔는지가 밝혀졌다.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또한 기업들이 법인 소득세를 극단적으로 절감하고 때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이러한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원자재 대기업 글렌코어(Glencore)는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함으로써 채굴권 협상 중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세프 카빌라(Joseph Kabila)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로 그 외에도 여러 형사 조사 사건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하여 EU의 조세회피처 관련 조치가 가속화되었고 전

세계 시민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세회피처의 철폐를 촉구하게 되었다.

23. 라바 하토 작전: 깨끗한 차, 더러운 돈

- 브라질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건설 대기업 오데브레히트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기업 네트워크가 연루된 '라바 하토'(Lava Jato),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조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 되었다.
- 이 스캔들은 국제 뇌물수수, 정당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 범죄조직, 기업 고위임원의 부정행위, 부패한 정치인, 브라질 정재계 등 많은 부분에서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일부만 노출되더라도 연쇄 사건을 불러오는 등 부패에 관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약 미화 10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과 6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관련된 라바 하토 작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최소 12개국에 연관이 있으며, 그 결과로 정치인과 기업인 15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여기에는 한 명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두 명의 후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4. 트로이카 자금세탁기

- 러시아 국부의 절반은 역외 조세회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투자은행이었던 트로이카 다이얼로그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은행은 전 세계 조세회피처에 75개 이상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지금은 없어진 리투아니아 우키오 방카스 은행이나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센 은행, 독일 코메르크뱅크 등 유럽지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예금주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르메니아 출신 노동자의 명의를 서류에 사용했다.

- 이 유령회사들을 통하여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최소 미화 2백60억 달러 이상이 드나들었다. 이 돈의 일부는 트로이카 자금세탁기의 범위를 벗어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깨끗한 돈으로 위장하여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러시아 세력가와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국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러시아 및 외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호화 요트를 구입하고 사적 파티에 유명 가수 등을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

25. 체키아 안드레이 바비시의 이해관계 충돌

- 거의 30년간의 평화 시위 끝에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2019년 6월 초 체키아 프라하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 유럽연합 집행기관(EC)에서 바비시가 자신의 사적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 충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시위가 확산되었다. 바비시 총리 소유의 다수 기업 중 하나인 아그로페르트가 EU 농업보조금으로 미화 1천9백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국제투명성기구 체키아 지부를 통해 밝혀지면서 유럽연합 집행기관은 바비시 총리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바비시 총리는 2017년 문제의 회사를 두 개의 신탁으로 분할했지만 계속해서 해당 기금의 최종 수혜자로 남아있었고 이처럼 회사 소유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겨왔다. 체키아에서는 바비시와 같은 ‘수익권자’가 공개되지 않으나 이웃나라 슬로바키아에서는 신탁이 공공계약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해야만 한다.
- 슬로바키아법과 국제투명성기구 체키아지부의 조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기구는 최근 아그로페르트가 지난 2년간 받아간 납세자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원문기사 : 25 corruption scandals that shook the world (TI, 2019.6.26)

2 국제회의 동향

1 '19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5.14(월) ~ 5.16(목) / 멕시코 멕시코시티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일본, 멕시코)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싱가포르, 터키, 네덜란드 등 참관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ADB 등 국제기구 대표
 - ※ 권익위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 호승진 검사

2. 회의 주요 결과

- 2019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2019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될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 및 '인프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을 중점으로 논의
 - '인프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은 초안에서 '가이드'로서 논의되었던 것이 그 보다 낮은 단계인 '모음집'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합의
 - ※ 우리나라 우수사례로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16년 OECD 공공행정국에서 발간한 'Integrity Framework for Public Investment'에 소개된 바 있음
 -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의 대부분의 내용이 권익위의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12개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함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 주요 내용
I)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책적 프레임 제공
II) 신고자 보호의 영역을 널리 설정하되 명확히 할 필요
III) 보호 대상 신고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IV)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시적 신고 창구 마련과 적절한 지원 제공
V)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 유지
VI) 내부고발자 보복에 대한 포괄적 정의
VII)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탄하고 종합적인 보호 보장
VIII) 보복에 대한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처벌
IX) 내부고발자 면책 보장
X)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훈련, 역량강화, 인지제고 활동 운영
XI) 내부고발자 제도 시행과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XII) 내부고발자 보호 선도

3. 정부 대표단 활동 내용

- 우리 대표단은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각 조직에서 기본적인 내부 고발 제도 및 창구를 마련하는데 좋은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으며, 제 5항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support) 부분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됨
 - 또한, 제 6항에 당초 조직 내부자 보복에 대한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 외부자에 대한 보복(계약파기, 명예훼손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여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반영됨

- 아울러, 러시아 대표단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한-러 G20 대표단 양자회담에서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함
 - 러시아 측은 IACA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 등 재정 기여국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core group of countries)을 별도로 운영 하자고 하였으며, 현재 구상중인 새로운 운영 전략을 5월말 경 이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언급함
 - 우리 대표단은 IACA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으며, IACA 재정 지원 국가로서 새로운 IACA 운영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2 '19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5. 13(월) ~ 5. 19(일) / 멕시코 메리다
- 참석자 : 박은정 위원장,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김미란 사무관, 한효정 에디터

2. 주요 성과

□ 국제 옴부즈만 발전 협력을 위한 주도적 논의 참여

- 옴부즈만 개념의 올바른 확산 및 세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주도적 참여
 - 옴부즈만에 대한 베니스 원칙, 유럽평의회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 옴부즈만 국제 결의 제정의 합리적 방향 유도 및 확산 도모
- 규정개정 소위원회 멤버로서 IOI 규정 개정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
 - 집행부 구성의 형평성, 지역대표 구성의 공정성, IOI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 주 멕시코 한인 권익보호를 위한 멕시코 옴부즈만과 협력방안 논의

- 멕시코 옴부즈만에게 주 멕시코 한인 사회의 중요성 환기
 - 에네켄 한인 이주 후 5세대까지 이어지는 한인 이민사, 메리다 시의 5월 4일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등 소개
- 주 멕시코 재외교민·동포 권익보호 협력방안 합의
 - 멕시코 옴부즈만과 권익위원회의 협력 내용과 권익위 심볼을 넣어 멕시코 옴부즈만 고충 제도 소개 팸플릿 제작
 -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 옴부즈만 팸플릿을 한국 교민에게 배포
 - 한인 교민 권익 침해시 한국 대사관-권익위-멕시코 옴부즈만 간 협력 하에 해결 추진

③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5. 27(월)~29(수)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관기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38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등
 - ※ 우리측 : 법무부 국제형사과 박성진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옥영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사무관

2. 회의 주요 결과

- 2주기 4년차 점검국 추첨이 5.24(금)일에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점검국으로는 아이티와 사모아가 선정
- 2주기 이행점검 결과물은 점검이 완료된 20개국의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5장(자산회복) 중심으로 발표하였는데, 부패범죄에 대한 시효 연장, 자산 추적·회복 전담기구의 설립, 비선고기반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NCB 몰수) 활용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
- 패널토론에서, 영국은 새로운 민사몰수 도구로 설명불가능한 치부(unexplained wealth) 명령, 독일은 중대범죄의 경우 비선고기반 몰수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였음을 소개
- 기술지원 세션은 자산회복WG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역량배양 및 기술지원에 대한 포럼에서 키르기스-미국-UNODC가 공조한 자산회복 성공사례가 발표됨
- 자산관리 기술지원 포럼에는 체코 내무부,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 이탈리아 조직범죄수익처분청, UNODC가 몰수 자산 관리 사례를 소개

4 '19년 OECD 제2차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6. 25(화) ~ 6.28(금) / 프랑스 파리
-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참석자 : 36개 OECD 회원국 및 EU,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 ※ 우리측 : 법무부 국제형사과 박성진 검사, 인천지검 임하나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문소희 사무관, 주오이시디대표부 최윤선 서기관

2. 회의 주요 결과

- 일본, 헝가리에 대한 4단계 이행평가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체코에 대한 4단계 평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평가 등을 실시
 - 일본은 자국의 국제뇌물 관련 제재 수준이 뇌물방지협약(제5조)에 불일치(not consistent)한다는 사무국의 의견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수준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
-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에 대한 해외 뇌물 수사 및 공조현황 공유(Tour de Table)
- 그리스의 최근 형법(Criminal Code) 및 형사소송법(Criminal Prodecure Code) 개정안(2019.7.1. 시행)이 해외뇌물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 감소와 공소시효(5년)가 짧다는 지적에도 이에 대한 미변경 및 국제뇌물죄의 불기소 가능성 등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치라는 의견이 공유됨

- 우리측은 아일랜드와 함께 그리스의 3단계 이행평가를 담당한 주심사국(lead examiner)으로서 그리스의 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발언 제시
- 그리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조치(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 그리스 총리 앞 서한 발송,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성명 (Public Statement) 발표)를 의결함. 아울러 그리스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을 개시하고, 심사단(우리나라 포함)이 그리스를 현장 방문(가을 예정)하여 2019.12월 평가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함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태국 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IOI, 2019.4.10)
 태국 옴부즈만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옴부즈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태국 옴부즈만을 포함한 태국 옴부즈만실(분 타파나둘Boon Tapanadul 과 솜삭 수완수자리트 Somsak Suwansujarit)이 이끄는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과 옴부즈만실 사무총장 및 수행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15~19일 태국 옴부즈만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양자 협력 MOU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찾았다.
- 이번 방문으로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은 주한 태국대사(싱통 라피사테폰 Singtong Lapisatepun), 노동 담당관(핀유다 참찬스리 Pinyuda Chamchansri), 그리고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 국장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태국불교 법당 왓 붓다랑시에서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제와 불편 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권익위 대표단은 이동식 민원 서비스 버스 (이동신문고 버스) 차량을 가지고와 태국인 노동자들의 민원을 접수했다.
-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과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 대표단은 세종시에 위치한 권익위 사무소에서 태국 옴부즈만과 권익위 간의 MOU 따른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 정책회의와와 별도로 태국 옴부즈만은 태국 옴부즈만실 사무총장을 중재 사례 관련 지식 및 경험 교류에 참여하는 옴부즈만실 대표단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 뒤이어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과 김재학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사관이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집단 민원에 적용될 예정인 민원 해결 조정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업단지가 부당하게 폐쇄한 공공도로의 재개방 사례와 중소규모 공장 부지를 우선 제공하기로 계획 하에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실제로는 중소규모 공장에 대한 할당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복잡한 규제 때문에 도로 확장 이후 도로 한복판에 놓여있게 된 전신주의 위치를 재조정 한 사례 등 3가지의 사례를 소개했다.

-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뒤이어 태국 옴부즈만실 사무총장은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화해와 문제해결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태국 옴부즈만실 사무총장은 앞서 언급한 태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 두 사례는 1) 공무원의 공금 유용 목적을 위하여 불법으로 사망신고가 된 민원인의 신분증 발급, 2) 도로 건설 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사업과 도로 공사의 영향을 받는 토지와 재산에 대하여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 태국 옴부즈만실 사무총장과 권근상 국장은 뒤이어 MOU를 통한 양 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직원 교류를 통한 실무 차원의 지식과 경험 교환, 공공이익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양 기관 및 양국 공무원에 대한 공동 교육 등의 활동을 제안했다.
- 태국 옴부즈만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는 2011년 12월 처음으로 MOU를 체결했으며, 2014년 12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MOU를 갱신했다. MOU는 양국 국민의 보호, 민원처리제도의 개선, 지식과 우수사례 교류, 양국 국민의 고충 처리 등을 포함한 옴부즈만 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출처: THAILAND ‘Thai Ombudsman visits ACRC Korea for MoU implementation’ (IOI 홈페이지>News, 2019.4.10.)

영국 혼란을 야기한 요금 정보 안내 이후 런던 시의회와 노인요양원의 정책 개정

(IOI, 2019.4.25)

영국 지방정부·사회보장 옴부즈만은 환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과한 요양원의 요금 부과 체계를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 영국 지방정부·사회보장 옴부즈만의 발표에 따르면 한 환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지불한 사건 이후로 런던 자치구 바킹 & 다겐햄과 모어랜드 하우스 요양원이 요금 부과 정책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 런던 시의회와 요양원은 한 환자의 딸에게 치료비용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사회보장 옴부즈만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시의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사용자의 분담금 징수를 외주 계약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징수 방식은 현행 사회복지 지침 상 허용되지 않는다.
- 조사 결과 시의회와 의료기관이 민원인 모친의 요양원 이용비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요양원의 비용 청구 일부가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시의회는 민원인의 모친에 대한 개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치료나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불 비용 없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는데, 이는 ‘요양법’(Care Act)에 부합하지 않는다.
- 지방정부·사회복지 옴부즈만 마이클 킹(Michael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2015년 우리의 집중 보고서와 그 이후 발간된 많은 공공 보고서에서 옴부즈만은 시의회들에게 요양원이 시 당국을 대신해서 제3자에게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러한 비용

지불이 환자 가족들에게 유일한 선택이 되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한 절대로 의료기관이 이용자에게 직접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시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에서 시 당국이 지불하는 제도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재정 전문가 조차도 비용 지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시의회와 요양원 모두가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환영할만한 움직임이다.'
- 문제의 요양원은 민원인의 고충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파운드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 옴부즈만은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시의회가 모든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 개인 재산을 포함하여 치료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 내에서 요양원 입소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 요양원은 시의회가 처리한 환자 입소 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개별 계약서상에서 제3자 추가 비용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게 될 것이다.

※ 출처: UK 'London council and care home amend policies after giving confusing information about fees' (IOI 홈페이지>News, 2019.4.25.)

뉴질랜드 : 뉴질랜드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IOI, 2019.5.21)

뉴질랜드 정부는 아동부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고 옴부즈만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등 옴부즈만의 감독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뉴질랜드 정부는 아동복지 제도와 아동 문제 개선을 위하여 아동부인 오랑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에 대한 독립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시안에는 국가의 보호관리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원과 조사에 대한 옴부즈만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피터 보시어 (Peter Boshier) 옴부즈만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의 행정 조치를 감독하는 기존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제시안에 근거하여 민원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긴급 사안을 신속하게 확인 및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단계에서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아동부는 모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해야 하고 모든 심각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옴부즈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로운 지침에 따라 옴부즈만은 특정 기관에 대하여 접수된 다수 민원을 통하여 더 넓은 분야를 검토하거나 제도 및 절차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옴부즈만은 ‘우리 옴부즈만실은 공공부문의 민원 해결과 복잡한 조사 수행 등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보통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다른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번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가 아동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만의 아동부 관련 기능은 향후 1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국가 보호관리 하에 있는 많은 수의 마오리족 원주민 아동을 고려하여 마오리족에게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보시어 옴부즈만은 25년 가까이 가정법원 판사로 일했으며 마지막 8년은 가정법원 대표판사직을 역임했다.
- 이번에 옴부즈만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 부여는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에 근거하여 2018년 중순 시행된 민간운영 노인 요양원에 수용된 환자의 치료와 법원 구치소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다.

※ 출처: NEW ZEALAND ‘Another new role for the Ombudsman in New Zealand’ (IOI 홈페이지>News, 2019.5.21.)

세계옴부즈만협회 : 멕시코 메리다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개최

(IOI, 2019.5.24)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는 신규가입 회원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IOI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IOI 재정 집행을 승인하였다.

-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연례 이사회회가 2018년 5월 14~17일 라울 곤살레스 페레스(Raul Gonzalez Perez) 멕시코 옴부즈만 겸 멕시코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의 주관으로 멕시코 메리다에서 개최되었다.
- 6대주 지역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연례 이사회에서는 현안과 과거 성취, 미래의 발전과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과 중남미,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신규 회원 12개국의 가입을 승인했고 이 중 8개국은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 또한, 이사회에서는 과거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던 지역별 보조금 사업을 2019/2020년 회원국들을 위하여 재개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었다. 202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총회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재원이 다소 모자랐던 회원들의 내년 총회 참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 연도에 추진될 새로운 교육 사업과 새로운 내규 개정 역시 이번 이사회회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 귄터 크라우터(Gunther Krauter) 사무총장은 자신의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임기가 2019년 6월 30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크라우터 사무총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협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치하했으며, 1년간 협회의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했다. 신임 사무총장 임명은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 출처: IOI 'IOI Board Meeting held in Merida, Mexico' (IOI 홈페이지>News, 2019.5.24.)

포르투갈 옴부즈만 지방도로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절차 완료 (IOI, 2019.6.17)

포르투갈 옴부즈만은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보상 기한과 절차를 수립하고 19명의 가족들에게 1백6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결정하였다.

- 포르투갈의 마리아 루시아 아마랄(Maria Lucia Amaral) 옴부즈만이 포르투갈 보르바 자치구에서 2018년 11월 19일에 발생한 255번 지방도로 붕괴 사고의 사망자 5명의 가족과 상속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 해당 사고에 대하여 19명이 정부 당국에 보상을 청구했으며 이들 모두 옴부즈만의 제시안을 수용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보상 수용 조건 수락 이후 6월 첫째 주에 이들 각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총리실에서 처리되었다.
- 정부당국에서 지급한 피해 보상금은 총 1백60만 유로 규모이다. 산업 재해 보상이 적용되는 경우 각 보험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연금이 보상금액에 더해진다.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 국가기관장인 옴부즈만이 총리의 요청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 참여로 255번 지방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이끌게 되었다.
-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2019년 1월 31일까지 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업무를 옴부즈만에 배정하기로 한 각료회의 결의안을 포르투갈 관보 디아리오 다 리퍼블리카(Diario da Republica)에 공표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상 기한과 절차를 수립하고 각 경우 별로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 공정성과 적절한 기준 적용을 위하여 옴부즈만은 2017년 대규모 화재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되었던 보상 절차 기준에 근거하여 이번 사건의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PORTUGAL ‘Ombudsman completes compensation proceedings for victims of municipal road collapse’ (IOI 홈페이지>News, 2019.6.17.)

호주: 옴부즈만 조사 결과 정부 관재사가 취약계층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THE AGE, 2019.6.27)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정부 관재사의 재정적 취약 계층에 대한 후견인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관재사의 지위 및 재정 지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 정부 관재사가 치매와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70대 여성이 평생 간직해 온 가족사진과 주소록 등의 물건들을 압수했는데, 이는 정부 관재사가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이 밝혀낸 또 다른 사례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정부 관재사가 재정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업체들이 직접 통장에 잔고가 27센트밖에 없었던 80세 노인의 채권 추심에 나섰다.
- 데보라 글라스(Deborah Glass) 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 관재사가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 정부 관재사는 장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능력을 잃은 빅토리아주 주민 10,000명 가량의 재정을 관리한다.
- 글라스 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 관재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재정적 후견인으로서의 역할과 국영기업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기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 지난 목요일 주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글라스 옴부즈만은 ‘관재사의 개별 의사결정에 상업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전반적인 서비스가 상업적 압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옴부즈만 보고서의 첫 번째 권고안은 정부 관재사의 국영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재검토하여 이러한 지위가 해당 기관의 공공 서비스 의무를 충족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 옴부즈만은 또한 정부 관재사가 의뢰인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 부처의 판단을 촉구했다.
- 정부 관재사 관련하여 최근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 빈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옴부즈만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관련 민원의 수가 대략적으로 두 배 증가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관재사의 재정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재정지원 수급 기회의 상실, 지연으로 인한 노인요양비용 증가, 사기나 재정 남용의 적발 실패 등이 포함된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이번 문제의 핵심에는 압도적인 수준의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용과 같은 사소한 일상적 지출 하나하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굴욕감의 문제인 것이다. 연금을 출금하러 은행에 갔는데 계좌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느껴질 굴욕감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 또한, 글라스 옴부즈만은 관재사 직원들 대다수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건설한 재정관리를 한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그러나 관재사가 의뢰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관리 미흡의 사례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며, 관재사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부 관재사의 매트 캐릭(Matt Carrick) 사장은 옴부즈만 조사가

- 관재사 업무 개선의 여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캐릭 사장은 '조사 결과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의뢰인을 신속하게 응대하고 의뢰인과 임직원을 더 잘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캐릭 사장에 따르면 관재사에는 임직원 교육 개선과 의뢰인에 대한 지급 시간 단축 검토 등 일부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 캐릭 사장은 이번 주 임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옴부즈만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사 내 9개 직책을 없애고 12개의 직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캐릭 사장은 또한 임직원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관재사에게 지난 12개월은 특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관재사 이사회는 지난해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캐릭 사장의 전임자인 크래이그 덴트(Craig Dent) 사장을 해임했다. 덴트 전 사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 지난 4월, 빅토리아주의 공공부문 부패 감시단체인 IBAC는 정부 관재사에게 덴트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청하라고 권고했으나 회사 측과 덴트 전 사장은 분쟁을 비공개로 해결하기로 선택했다.
 - 팀 팔라스(Tim Pallas) 재무장관이 정부 관재사의 유일한 주주이며 재무부는 정부 관재사의 기업 구조와 재원확보를 검토하라는 보고서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 출처: AUSTRALIA 'Ombudsman finds State Trustees failed Victoria's most vulnerable' (THE AGE, 2019.6.27.)